

57년을 퇴행한 판결, 그 판사만의 생각인가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사법의 역사는 인권과 절차를 중시하며 발전해왔다. 미국 대법원이 흑인과 백인 강제 분리가 합법이라는 원칙을 깨고 '흑백의 생활 터전을 분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1954년이다. 그로부터 12년 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 등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대법원이 연쇄 성폭행법 아니스트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한 '미란다 판결'이 나왔다.

적법 절차를 강조한 이 판결은 당시 큰 논란을 불렀다. 앞으로 수사가 어려워지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 비난이 들끓었다. 하지만 그것이 기우였다는 걸 역사는 입증했다. 실제 미란다부터 풀려나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 후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증거로 미란다를 다시 기소했고,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을 복역했다. 성폭행범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판결을 이끌어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조차 사법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사법에서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흉악범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강력한 국가권력에 정의라는 명목으로

위법 수단까지 허용하면 언제든 절차를 무시하고 광범한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치주의 핵심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이다. 체포나 구속 같은 강제 처분은 반드시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영장주의), 악인을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도 위법한 절차를 통해 얻은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 점에서 얼마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에 관여한 이들에게 1심 "목적 정당하면 위법도 무죄" 판결 57년 전 '미란다 판결'과 배치 김명수 사법부 주류도 절차 무시 그제 '퇴행 판결' 낳은 것 아닌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역사적 퇴행이다. 성 접대 등의 혐의를 받던 김 전 차관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긴급 출국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에 대한 재수사가 압박한 상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목적이 정당하면 어느 정도의 절차적 위법은 눈감아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경우는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것과 달리 봐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단죄하는 과정에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사법의 시계를 미란다 판결이 나온 1966년 이전으로 되돌려버린 것이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판사가 한 사람뿐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초반인 2018년 '김명수 사법부'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는 전임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다며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했다. 영장 없이 판사 사무실 서랍을 뒤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도 검사 비위를 감찰하다 컴퓨터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로 전환해 영장을 받는데 판사들이 그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선의로 해석하면 그들도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이전 정당한 목적이라고 우길 명분도 사라졌다.

당시 조사위원회 주축 판사들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라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이 연구회 출신들이 김명수 사법부에서 요직을 독차지했다. '불법 출국 무죄' 판결을 한 판사가 이 연구회 출신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절차를 깰수록 여기는 김명수 사법부 주류들의 인식이 그 판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그냥 넘기기에 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다.

김준의 맛과 섬 [131]

거문도 미역귀탕

봄꽃 소식과 함께 햇미역이 남쪽 어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물미역이다. 마른 미역은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물미역은 이즈음에 봄 입맛을 돋우는 데 그만이다. 미역 채취는 지역에 따라 4월부터 태풍이 오는 8월까지 다양하다. 수온과 조차 등의 차이가 성장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울릉도부터 마라도와 백령도까지 국토 끝 섬에서 바다를 지키는 섬사람들의 오묘한 맛이 되어 준 해초다. 때로는 물으로 간 아이의 학비가 되었고, 때로는 속없는 남편의 노름빚을 갚는 비용이 되기도 했다. 명절에는 미역 주름을 해 소를 잡고 돼지를 잡기도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좋은 미역을 찾아 더 깊은 곳으로 물질을 했을 터다. 생명줄 같은 미역바위를 매년 추첨을 해주

인을 정하고, 집집마다 정해진 인원이 참가해 공동노동하며 똑같이 나누기도 했다. 물질을 못하는 사람들은 미역을 추리고 가다를 만드는 일을 했다.

그 일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마을공동체에서 반짓(절반)을 몫으로 주었다. 미역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생생줄인 탓이다. 한 울 두 울 더해 한 가닥 미역을 곱게 말려 이고 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단골집에 미역을 팔았다. 이런 행상을 완도에서는 '인꼬리'라고 했고, 거제도에서는 '섬돌이'라고 불렀다.

미역이 화폐로 통용되다 보니, 섬사람들은 온전한 미역 한 가닥을 밥상에 올릴 수 없었다. 정작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미역보다 미역 가다를 만들고 남은 줄기나 미역귀를 밥상에 올렸다. 거문도에서는 봄철이면



잘 팔렸다가 보릿고개를 넘기는 요긴한 식량으로 사용했다. 그 음식이 미역귀탕이다.

마른 미역을 물에 불려서 잘 씻은 후 마늘과 파에 들기름을 넣고 살짝 익히듯 기름장을 만든다. 여기에 미역귀를 넣어 볶다가 육수를 넣은 후 흥미나 해물을 넣는다. 그리고 밀가루를 넣고 끓인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방아잎을 넣어 준다. 지금은 쌀가루나 들깨가루를 넣기도 한다. 옛날에는 잔치 음식으로 손님들에게도 내놓기도 했다. 봄을 나가기 힘들었던 만반다 섬사람들의 음식이었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社 說

돌연 공기 6년 단축한다는 가덕도 공항, '믿거나 말거나'인가

가덕도 신공항을 2030 부산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고 14일 국토부가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사 기간 9년 8개월로 2035년 6월 개항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 기간 등을 무려 5년 6개월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마치 떡 주무르듯 한다. 세계 공항 건설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때와 달라진 것은 가덕도 공항을 전 부 해상 매립해 짓는 것이 아니라 육상과 해상에 걸쳐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경만으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 1단계 사업은 9년 걸렸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된 안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한 방안 중 하나(D안)와 유사하다. 1년 전엔 D안 공사 기간이 9년5개월이라고 했다. 기존 채택안(E안)과 3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에서 1년, 부지 조성 공사에서 29개월, 여객터미널 공사 기간에서 27개월 등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공사 기간을 이렇게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안전이 생명인 공항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연구·검

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냈다는 것인가.

가덕도 신공항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프랑스 전문 기업은 "태풍·해일에 취약하고 바다를 매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안전성, 경제적 모두 낙제점을 주었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폐기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정권이 선거용 카드로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도 표를 의식해 동조했다. 김해공항도 부산에 인접해 있는데 엑스포를 치르지 못할 이유가 뭐가. 내년 총선 부산 경남 표를 얻으려고 이런 '믿거나 말거나'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13조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지역민 세금이 아니라 전 국민 세금이다. 국토부가 계산한 이 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얻는 편익이 쓰는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자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또 어떤 조치가 계획 변경이 나올지 모른다. 역사가 역지를 부르고 있다.

美 원자력 추진 잠수함 호수에 제공, 한국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이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호수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다. 호주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길 꺼려온 원자력 잠수함과 기술을 호수에 넘기는 것은 대중 견제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호주와 중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중국의 호주산 유류·보리·와인·석탄 수입 제재로 분쟁도 겪었다. 호주는 바다가 넓어 재래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 호주 못지않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가 한국이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성공한 뒤 북극성 4-5형을 잇따라 선보였다. 지난 12일에는 잠수함에서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도 발사했다. 북이 바다에서 SLBM을 쏘면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북한 잠수함 기지 부근에서 우리 잠수함이 상시 감시하고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장기간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수중 작전 기간

이 아무리 길어도 10여 일을 넘지 못한다. 이러서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3-6개월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50%가량 빠르다.

김정은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언한 상태다. 이미 설계 연구를 끝냈다고 한 만큼 10년 안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면 더 이상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남북, 미·북 관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에 대응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잠수함 감시는 미국이 할 테니 한국은 그냥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말이 되는가. 한국민 안전보다 핵 비확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엔진이 원자로일 뿐 핵폭탄과는 관계가 없다. 원칙적으로 어떤 나라든 원자력 추진 함정을 가질 수 있다. 아무런 원자력 산업 기반이 없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허락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때다.



동영상 시청

귀족 노조 철용성 쌓은 현대차, 400명 '킹산직'에 18만명 몰렸더니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실시한 기술직 신입 사원 400명 공채에 서류 접수자만 18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추산됐다. 대략 450대의 경쟁률이다. 접수 첫날부터 2만명 넘게 몰려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될 정도였다. 응시자 중엔 대졸 사무직이며 교사, 공기업 직원, 7-9급 공무원들까지 있다고 한다. 현대차 수험사가 불타나게 팔리고 '현차 고시' '킹산직(왕 생산직)'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중소기업 등 제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현대차 생산직만 이토록 사람이 몰린 것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이 12%이고, 나머지 88%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직원이다.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이고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임금 높고 고용이 보장되는 현대차 생산직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강성 노조 덕에 현대차 생산직은 성과에 상관없이 때 되면 꼬

박오박 임금 오르고 상여금도 두둑한 '꿈의 직장'으로 꼽힌다. 현대차 생산직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생산성은 현저히 낮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이 현대차 국내 공장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보다 두 배 길다. 일본 자동차 회사 노조는 스스로 성과급제 도입을 요청하는데 현대차 노조는 거꾸로 호봉제 강화를 요구한다. 일은 적게 해도 돈은 많이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킹산직'이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을, 그나마 겨우 400명 뽑는다는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노조 탓에 청년 신규 채용을 못 하는 것이다. 대형 귀족 노조의 기득권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일손이 없어 쫓겨가는데 강성 노조가 보호막을 쳐놓은 철밥통 일자리에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병리 현상이다.

전체주의와 맞서 싸워 이기려면? 국가 정상화 3대 과제는 바로 이것

1. 자유민주주의 가치 재확립
2. 전체주의 적폐 청산
3. 2024 총선 공천 물갈이

윤석열 대통령·김기현 대표, 무엇을 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와 김기현 국민의힘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1 재확립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

당정 노선을 정통 자유주의로 재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 ▲ 자유주의 철학역사관-세계관-정치-경제-사회-문화
- ▲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 리모델링
- ▲ 한-미-일 협력 및 인도-태평양 자유 연대로 가야 한다.

정통 자유주의 세력이 싸워야 할 대상은,

- ▲ 자유를 뺀 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 ▲ 유사 전체주의
- ▲ 좌파 파시즘
- ▲ 북에 대한 가짜 평화주의
- ▲ 중국몽(中國夢) 시대주의
- ▲ 기회주의와 내부 총질
- ▲ 대통령 리더십 식문화 기도다.

2 청산하라! 민중민주주의 적폐·전체주의 악법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민주 진영은 문재인 정권과 NL 운동권이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각종 민중 혁명 구조물을 청산해야 한다.

- 청산할 적폐는,
- ▲ 자들의 부패한 기득권 카르텔
 - ▲ 노동·교육·연금 적폐
 - ▲ 국회란 이름의 '민중 통법부(通法府)'
 - ▲ 사법부란 이름의 '김명수 법조 운동권'
 - ▲ 방통위·공영방송이란 이름의 '선전선동부'
 - ▲ 북한 직업동맹 및 간첩과 연대한 노동 운동
 - ▲ 베네수엘라 차베스(Chavez)식 퍼주기 포퓰리즘
 - ▲ 원전 황폐화를 노린 폭거
 - ▲ 대기업을 포스코 화(化)하려는 '민중주의 약탈'
 - ▲ 기업 죽이는 각종 규제와 과도한 상속세

'민중 통법부'가 소수의견을 짓밟고 강행 통과시킨 각종 위헌 법률들도 혁파해야 한다. 최근엔 '방송영구장악법', '노란봉투법'을 시도하고 있다. 근현대 역사적 사건·사태를 운동권식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처벌하려는 발상이야말로, 자들의 사상 독재 의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법으로 위장한 독재'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3 물갈이 하라! '2024 총선 공천'

위 국가 정상화 과제들은 '2024 총선'에서 자유민주 진영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승리하기 위해선,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자유 전사들을 뽑을 과감한 '물갈이 공천'을 해야 한다. [당정 협조] 아닌 [당정 분리] 운운하는 정계-언론계 일각의 '자기 정치'에도 휘말려선 안 된다.

지금윤 윤석열 자유주의 당정 리더십 확립이 필요한 시국이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3월 13일 게재 되었습니다.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이 광고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